

대입 흐름 맞춰 공정성 강화·전형 단순화 진행

박소은 기자 unaos@knu.ac.kr

대학 입시(대입)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신입생 수요 측면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입시 지원율이 낮아짐에 따라 대학은 물론 교육부 차원에서도 대책 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대입 선발 과정에서는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대입의 변수가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교육 체계의 변화 또한 도모되고 있다. 우리신문은 변화하는 대입 흐름과 교육 구조 및 체계에 따른 우리학교의 현 상황과 향후 방향성을 살펴본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002년 신생아 수가 49만 690여 명을 기록하며 50만 명의 바다를 깐 이후 신생아 수는 매년 4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구 절벽 시기 출생 인구가 대입에 뛰어든 올해 수능 응시 지원자는 총 50만 8,030명으로, 직전 해보다 1,791명 감소했다. 더욱 이 졸업생 지원자를 제외한 재학생 지원자 수는 35만 239명으로 전년 대비 1만 471명이 줄어들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일부 대학은 큰 피해를 받고 있기도 하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책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내세웠다. 최근 인하대학교, 성공회대학교(2021년 8월 발표 대학 기본역량평가 탈락 대학, 총 52개교) 등 여타 대학이 교육부 지정 부실대학으로 선정돼 국가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정원 부족으로 통합하거나 폐교 조치가 취해진 대학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3~2024학년도부터는 효과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조정처

“향후 재정 타격 있을 수도”,
학생 변별 능력도 요구돼

우리학교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직접 피해를 겪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조정처 전략기획팀 관계자는 “정부 차원의 강제 개입이 없다면 우리학교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다만 “지방대학의 균형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강제 및 유사 방법으로 수도권 대학에 입학정원 축소를 요청할 가능성은 상존한다”며 “향후 정부 정책에 따라 대학 내 재정 타격의 규모가 결정된다”고 피해 가능성에 관해 언급했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대학



지난 수시모집 논술고사 당시 서울캠퍼스 모습 (사진1) 수시모집 입학원서 및 서류 제출 장소였던 네오르네상스관 앞 (사진2)

(사진1=대학주보DB), (사진2=박소은 기자)

의 우수 학생 유치 가능성도 낮아질 우려가 있다. 1318대학진학연구소 유성룡 소장은 “지방대학에서 학생 선호도가 높은 학과를 중심으로 구조개혁을 단행하는 등의 대책을 보이면 현시점에서는 영향권 밖인 서울권 대학들도 낮은 선호도의 학과를 중심으로 점차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요 대학도 대안 추진 우리학교, 운영재정 충당과 대학 브랜딩에 앞장

이에 우리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사전예방 차원의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조정처에 따르면, 재정 측면의 타격에 대비하기 위해 ▲동문 참여를 통한 대학 기부금 확대 ▲등록금 외 수입 확대 (대관료, 평생교육, 국고 등) ▲정원 외 등록금 수입 확대(외국인 등) ▲특수대학원 등 등록금 수입 확대 ▲지출 효율화 등의 방법을 계획 또는 진행하고 있다.

대학 브랜딩을 통해 학생 모집 경

쟁력을 키우고도 있다. 기획조정처 측은 “커뮤니케이션센터” 조직을 운영해 대학 브랜딩 강화와 대외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 관해서는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학생설계전공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학생 수요 기반의 신규 학사 제도를 도입 중에 있다”며 “고등교육환경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것이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실질적인 계획안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학교를 비롯한 주요 수도권 대학들의 관련 피해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 대학 협력 차원에서 주요 대학에서도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년 정원 미달 사태를 겪는 지방의 주요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몰리는 수도권 대학이 피해 분담 차원에서 정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서울대학교(서울

대)는 『2022~2040 서울대 장기발전 계획 중간보고서(안)』를 통해 학령 인구 감소의 타격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지 않도록 학부 정원 감축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대는 국내 학생의 공백을 채울 유학생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외국 대학과의 교육과정을 맞추고자 ▲9월 학기제 ▲3학기제 등 큰 틀에서 학제 개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소장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 미래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신입생 선발을 위한 고민은 필 요하다”며 대학 브랜딩과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신입생 선발을 위해 대학별 특성화 정책과 학과 개편 등의 구조개혁이 필 요하다”며 “대학 비전과 인재상,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입 공정성에도 민전 기하는 중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최근 반복된 정치권 등 일부 유력인 자녀에

대한 특혜나 입시부정 의혹으로 입시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입 제도 개편이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신뢰도 회복은 더딘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내일신문에서 실시했던 『2019년 교육정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63.9%의 학부모가 대학 입학사정관의 자질과 능력에 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를 비롯해 대입 신뢰도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 반응이 계속되자 지난 5월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해 여전히 많은 분이 불공정을 느끼시는 것 같아 송구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또한 현재 대입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수시 전형 신입생 서류 모집을 진행했던 우리학교는 교육부 주관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참여하며 입시 동향에 따른 입학 운영의 변화를 도모 중이다.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대입 공정성 ▲수험생 부담 완화 ▲입학사정관 전문성 ▲고교 교육 연계성 등 4가지 영역을 평가해 대입 공정성 강화와 전형 단순화를 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학교의 2023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 전형에서도 일부 전형의 방법과 평가 기준이 변화했다. 먼저 학생부종합전형 중 ‘고른기회전형 I -특성화고 졸재직자’ 전형에서는 기존의 면접 평가가 사라져 서류와 학생부 교과 성적으로만 일괄합산 평가하는 방향으로 달라졌다. 우리학교 입학전형연구센터 조민경 입학사정관은 “교육부 전형유형의 단순화 정책에 따라 기존 고른기회전형의 운영방식을 동일 적용한 결과”이며 “동시에 수험생들의 면접평가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학생부교과전형에는 기존의 평가 기준에서 ‘교과종합평가’를 추가했다. 기준과 비교했을 때 성적을 제외한 지원자의 역량 등을 질적 평가하는 기준을 높인 것이다. 이에 조입학사정관은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과 역량의 종합평가, 특히 수업 태도와 탐구력 등 학업 수행 충실퇴와 지원 전공(계열)에 대한 과목 선택의 적절성 및 성취도를 평가하고자 했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학교가 참여하는 고교 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진행됨에 따라 신입생 선발에 있어서 계속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